

보건복지 소식 광장



보건복지 소식 광장

보건복지부 2023년 7월 보도자료(http://www.mohw.go.kr/front_new/al/sal/0301ls.jsp?PAR_MENU_ID=048&MENU_ID=0403)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.



I

국민의 의료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

- 박민수 제2차관, 상급종합병원장 긴급상황점검회의(7.12.) -
- 보건의료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요청 -

-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2일(수) 14시 서울에서 상급종합병원장*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하였다.

*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중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(18개소)의 병원장

- 이번 긴급상황점검회의는 7월 13일부터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하여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·지자체·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.

-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하여 6월 28일 「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」을 구성하여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.

- 6월 28일에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소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.

- 같은 날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「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」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‘관심’ 단계를 발령하였다.
- 7월 6일에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비하여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였으며, 7월 11일부터 「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」을 운영하고 있다.
- 이를 통해,
 - 응급의료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,
 - 각 지자체가 비상진료기관과 진료 중인 병·의원 명단을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으며,
 -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콜센터(129) 등을 통해 제공하였다.
- 7월 7일에는 시·도 보건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, 응급실·중환자실·수술실 등의 필수유지업무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하였다.
- 보건의료노조가 「산별 총파업투쟁 계획」을 발표한 7월 10일에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대책을 재점검하고 지역 의료기관 내 필수유지업무 이행체계를 모니터링 하였다.
-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보건의료정책 목표로 삼아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.
- 이에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에 20개 직종, 201만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국가통계를 마련한 바 있다.

- 금년 4월에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‘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’을 발표하고, 그 후속 조치로 「진료지원인력 개선협약체」와 「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약체」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.

- 의료와 간호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「간호간병통합서비스」와 「간호등급제」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. 이 제도들은 간호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 현상, 지역의료에 미치는 부작용이 없는지와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개선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 국가 주요 시책이다.

- 박민수 제2차관은 “이처럼 정부가 의료현장의 개선을 위하여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정책 이행시점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. 보건의료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. 정부는 필수의료대책,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- 그리고 “의료기관의 응급실, 중환자실,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가 충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들이 평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장들이 적극 노력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- 아울러,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기관별 노사교섭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청취하고, “입원환자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줄 것”을 요청하였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20745. 의료기관정책과. 2023. 07. 12.

II

스마트 기술로 장애인 재활운동체육의 미래를 선도하다

- 국립재활원, 지능형 재활운동체육 중개연구사업(R&D) 심포지엄 개최 -
- 지능형 재활운동체육 기기 및 프로그램 연구 성과 공유 -

■ 국립재활원(원장 강윤규)은 7월 14일(금) 서울 엠배서더 호텔에서 지능형 재활운동체육 중개연구사업(R&D)을 통해 개발한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
■ 국립재활원의 ‘지능형 재활운동체육 중개연구사업(R&D)’은 장애인이 병원에서 지역사회까지 지속적으로 건강 증진 및 재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마트 재활운동체육 기기 및 프로그램 등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.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다부처(보건복지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·문화체육관광부·산림청)가 협력 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*의 일환이다.

- * 다부처 협력 사업명: 「지역사회 장애인·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 운동·치료기기 개발 및 융복합 서비스 구축(R&D)」
- 보건복지부: 「지능형 재활운동체육 중개연구사업(R&D)」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: 「공공기반 재활운동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사업」
- 문화체육관광부: 「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」
- 산림청: 「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」

■ 이번 심포지엄은 국립재활원의 ‘지능형 재활운동체육 중개연구사업(R&D)’에 참여한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재활 관련 전문가,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여, 스마트 기술이 활용된 재활운동체육 기기와 프로그램, 생체계측기 및 데이터 수집 방법 등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이들 성과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.

■ 개발된 스마트 재활운동체육 기기*는 최신 정보통신기술(ICT)을 탑재하여 장애인이 운동하는 동안의 운동 강도 및 자세 등의 정보를 인식하여 실시간으로 운동지도, 동기부여 등으로 피드백한다. 운동을 기록하고 그룹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의 재활운동체육 동기를 높임으로써 신체기능 향상 및 건강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.

* 개발된 스마트 기기: 상·하지 및 전신 운동기기 6종, 생체계측 기술 2종, 장애 유형별 맞춤형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가이드 5종

- 또한,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활동에서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며, 수집된 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향후 인공지능 맞춤형 재활운동체육 추천 프로그램 등으로 구현될 예정이다.
- 한편, 지능형 재활운동체육 중개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지능형 재활운동체육 기기들은 지난 6월, 서울 코엑스(COEX)에서 개최된 홈케어·재활·복지 전시회에 출품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 수출 타진, 국내 공공기관 보급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화를 개척하고 있다. 오는 8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‘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’를 통해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.
-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“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재활운동체육이 장애인분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 또한, “이 성과가 병원, 복지관, 체육시설에 도입·확산 될 수 있도록 임상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를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하여 지속할 계획이다”라고 덧붙였다.

참고 지능형 재활운동체육 중개연구사업 개요

■ 추진배경

- (다부처협업)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연결되는 부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운동 및 체육 다부처 협력 R&D 사업



※ 2020년 제6차 다부처특위 선정 사업(지역사회 장애인·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 운동·치료기기 개발 및 융복합 서비스 구축 (R&D) 연구개발사업)

■ 사업개요

○ (기간/예산) '21~'23/총 137억원

※ 다부처 총 예산: 461억원(복지부 137억, 과기부 143억, 문체부128억, 산림청 53억)

○ (주요 내용)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재활운동 및 체육에 관한 스마트 운동치료기기 개발 및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프로그램·서비스 연구개발

세부분야	주요 내용
1. 공통 연구개발	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운동 및 체육 관련 기기, 프로그램, 서비스 등을 적용하는 부처 서비스 연계 등 포함
2. 재활운동기기 연구개발	다부처 공동 활용을 위한 장애인 상지, 하지, 전신 재활운동에 특화된 운동기기 개발을 위한 의료기기 허가인증된 실내용 기기와 범용성을 지닌 실내용 기기 개발
3. 생체계측 및 데이터 기술개발	장애인의 운동 측정 기술을 활용한 다부처 협력 데이터 수집/분석/적용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
4. 프로그램 및 서비스	장애 유형별로 특화된 지역사회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과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련된 연구분야 포함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20759. 임상재활연구과. 2023. 07. 14.

Ⅲ

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확대

- 8월부터 31개 시·군·구에서 시간제보육 통합반 서비스 제공 시작 -
- 6개월~5세 아동까지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 -

■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와 한국보육진흥원(원장 나성웅), 한국사회보장정보원(원장 노대명)은 「2023년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」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.

■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, 취업 준비,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,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.

■ 기존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,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.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반 1차 시범사업(2022.9월~2023.2월)을 운영하였으며, 1차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 사항*을 보완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.

* ▲ 이용대상자 확대: (기존) 6개월~36개월 미만 영아 → (확대) 6개월~5세
▲ 운영시간 확대: (기존) 09:00~16:00 → (확대) 09:00~18:00

■ 이번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참여지역 공모 및 선정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31개 시·군·구*, 136개 어린이집, 204개 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.

* 서울(강서구, 동작구, 송파구, 중랑구, 양천구), 부산(강서구), 대구(동구, 북구, 중구), 인천(계양구, 서구, 연수구), 광주(남구, 북구), 대전(서구, 유성구), 경기(김포시, 안산시, 용인시, 하남시), 강원(동해시, 삼척시, 원주시), 충남(천안시, 청양군), 전북(전주시), 전남(강진군, 담양군, 장흥군, 화순군), 경북(구미시)

■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「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www.childcare.go.kr)」 → 「어린이집 - 시간제보육사업 - 시간제보육 기관찾기」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■ 시범사업 동안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(6개월~5세*)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(www.childcare.go.kr)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시간 단위**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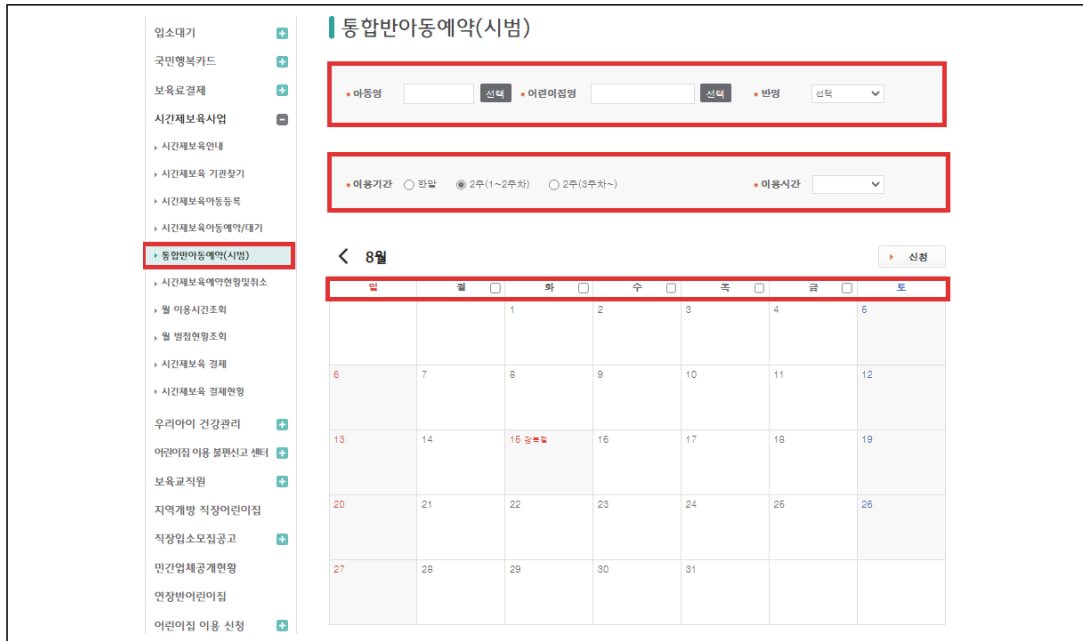
* 참여 어린이집별 운영반 현황이 다르므로 각 기관의 운영현황 확인 필요

** ① 오전 9:00~12:00, ② 오후1 13:00~16:00, ③ 오후2 16:00~18:00, ④ 종일 10:00~15:00

■ 7월 24일(월) 오전 9시부터 8월 이용에 대한 예약이 가능하며, 보육료는 시간당 5,000원*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,000원이다. 다만,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,000원 중 1,000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부모부담금을 현행(독립반)과 동일하게 1,000원으로 운영한다.

* 부모급여(현금)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아동은 시간당 1천 원(월 40시간)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, 보육료,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 부담(시간당 5천 원)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시범사업 기간 정부지원금은 월 40시간까지 지원되며, 월 4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. 보육료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현장 결제와 모바일 앱(app) 등을 통해 가능하다.

-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“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밝히며, “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20785. 보육사업기획과, 2023. 07. 20.

IV

지역특화 치매서비스를 추진한다!

- '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'을 위한 48개 치매안심센터 선정 -
-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한 사업 발굴 및 활성화 도모 -

-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지역사회 기반 치매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'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'을 공모하여 48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
- 전국 256개 시군구에 구축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익숙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있다.
- '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'은 기획력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치매 관리사업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 광진구 등 48개 치매안심센터를 선정했으며, 총 1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.
- 향후 선정된 치매안심센터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다른 지자체에 경험을 적극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, 연말 '2023년 치매관리사업 경진대회'에서 사업 추진이 우수한 지자체 대상으로 시상할 계획이다.
-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선도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경상북도 포항시는 치매환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포괄적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 의사, 간호사, 사회복지사가 찾아가는 의료·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,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일상생활, 돌봄·요양, 안전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.

- 전라북도 남원시는 상시 돌봄이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보호자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인력을 통한 개인별 상황 맞춤 돌봄서비스(인지교육, 안전, 일상생활 지원 등)를 제공하고자 한다.
-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치매조기발병 환자에 대해 치매안심마을 내 카페를 연계하여 매장관리 등을 통한 사회활동 지원할 예정이다.
- 전라남도 담양군은 치매환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치매 상황극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인식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.
- 울산광역시 북구는 치매안심마을 치매환자,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합창단을 구성·운영하여 음악 활동을 통한 치매환자의 인지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.
-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정리정돈 방법 교육, 집안의 동선 변화에 대한 인지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.
-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“이번 공모사업은 치매환자가 익숙한 공간에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이다”라며,
- “앞으로도 기획력 있는 지자체의 사업지원을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참고 치매안심마을 사업 개요

■ 목적

-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,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

* (치매안심마을)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, 일반 국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

목적	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
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사회는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한다. · 지역사회는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. · 지역사회는 치매환자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원한다.
추진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함양을 위한 치매인식개선 교육·홍보를 실시한다. · 치매 안전망을 위해 치매안심가맹점과 치매극복선도단체를 지정하고 치매환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. · 치매환자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■ 주요사업 내용

- (교육) 운영위원회 참여기관 · 단체 구성원 및 지역사회 일반 주민 치매 인식개선 교육 실시
- (홍보·인식개선) 치매친화사업장 지정, 홍보물 배포, 캠페인 등
- (사회활동 지원) 정서적 지원, 도구적 지원, 정보 제공 등 치매환자와 가족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

■ 치매안심마을 선정

- 지자체 여건 및 특성에 맞춰 행정구역(동 또는 리) 단위로 선정
 - (현황) 전국 710개 치매안심마을 운영 ('22.12.31.기준)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20801. 노인건강과. 2023. 07. 24.